트럼프 "日 잘못 길들여졌다…관세 30~35% 부과할수도"

"30~40년간 우리에게서 뜯어내…합의하기 정말 어려웠다"
"일부 국가와 무역 못할수도… 대부분 친절한 서한 보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기간의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1일 거듭 밝혔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할지에 대해 질문받자 "아니다. 나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나는 많은 나라들에(상호관세율 등을 적시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일본에 대해 "우리는 일본을 상대해 왔는데, 나는 합의를 할지 확신을 못하겠다. 일본과는 합의를 할지 의문시된다"고 밝힌 뒤 "그들은 매우 터프(협상에서 완고함을 의미)하다"며 "그들은 매우 잘못 길들여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일본을 사랑하고 새 총리(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정말 좋아한다. 그는 매우 강인한 남자"라고 밝힌 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서 30~40년간 뜯어내면서 잘못 길들여진 나머지 합의를 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관련한 예를 들자면 그들은 쌀을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도 (미국) 쌀을 받아들이지(수입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제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수백만대의 차를 보내면서(미국에 팔면서) 우리는 과거 10년 동안 차 한대도 그들에게 보내지(수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서 그들은 매우 불공정했다"고 강조한 뒤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은 그들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보낼 서한 내용에 대해 "우리는 당신들(일본)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종류의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당신은 (대미 관세로)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에 대해 매우 큰 무역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유예 전 일본에 대해 24%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상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미측 요구에 충분히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아예 (미국과의) 무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나 대부분은 수치(상호관세율)를 정해서 한 페이지나 최장 한 페이지 반 정도 분량의 친절한 서한을 매우 단순하게 써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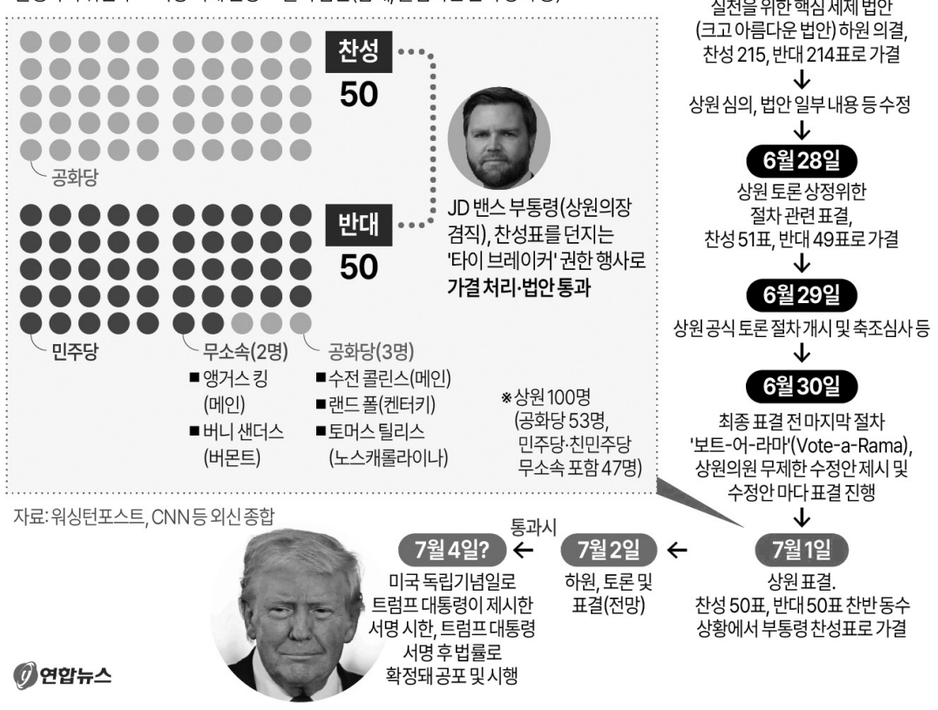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7월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나라에는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할 것이라며 경고해왔다.

이와 함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는 무역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트럼프 감세법안 美 상원 문턱 넘었다

부통령 찬성표 던져 힘겹게 통과
'트럼프 내치' 핵심법안 입법 속도
조문 수정에 하원 통과 절차 남아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1일(현지시간) 연방 의회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상원 문턱을 넘어서면서 집권 2기 '트럼프 내치'(內治)의 핵심법안이 성공적으로 입법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큰 승리를 안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난 달 하원을 거쳐 상원에 넘어온 해당 법안은 심의 과정에 몇차례 조문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원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상원이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뤘지만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는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가까스로 가결 처리됐다.

현재 미 상원(전체 의석수 100석)은 여당인 공화당 53석, 민주당(친민주당 무소속 포함) 47석인 가운데,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아울러 공화당에서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등 3명의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같은 당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도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으나, 표결 직전 공화당 지도부와의 회동 결과 알래스카주에 혜택이 돌아오는 쪽으로 법안이 수정되자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결국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해당 법안은 '감세 법안'으로도 불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공약한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천달러 예금 계좌 등의 내용, 부채한도를 5조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 대선 공약이던 국경 장벽 건설 및 구금 시설 확대 등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175억 달러)과 새로운 국방 예산(150억 달러)도 들어있다.

아울러 감세 연장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 추진했던 정책 예산에 대한 삭감 조처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 통과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돼 공포·시행된다. 하원은 2일 이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일정을 잡았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군함도 세계유산' 10년…日 '강제노동' 외면 10년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규슈 나가사키현 '군함도' 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10년(5일)을 앞두고도 일본 정부는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 설명을 추가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나가사키시에서 배로 40분이면 닿는 하시마(端島)의 별칭인 군함도는 일본이 2015년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이하 '산업혁명유산') 중 하나다.

일본은 조기에 산업화를 이룩한 서양에서 멀리 떨어진 동양 섬나라가 반세기에 걸쳐 추진한 공업화의 흔적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2015년 독일에서 개최된 세계유산위원회 막판까지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고, 일본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자문기구 권고를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밝혔다.

당시 일본 대표는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며 일본은 정보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 약속을 발판 삼아 산업혁명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성공했지만, 등재 직후부터 태도를 바꿔 강제노동이 없었다는 억지 논리를 폈다.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대표가 영어로 언급한 '노동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를 일본어로는 '일을 하게 됐다'로 표현했고, 각료들도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영어 언급이 '강제노동'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17년 12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강제'(forced)라는 단어를 빼고 '지원'(support)이라는 용어를 넣어 강제성을 희석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로 노역한 또 다른 장소인 니가타현 '사도 광산'이 지난해 7월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도 전체 역사 반영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일본은 사도 광산의 경우 산업혁명유산과 달리 등재 직후 광산 인근 건물에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 공간을 만들어 공개했지만, 전시물에서 '강제'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또 세계유산 등재 시 약속한 사도 광산 노동자 추도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도사 내용·행사 명칭 등과 관련해 한국과 인식 차를 보였고, 결국 추도식은 한국 측 인사가 참석하지 않아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양국은 올해도 사도 광산 인근에서 추도식을 치를 예정이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이 당초 예정됐던 7~8월에는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우크라군 "북, 러 '판치르' 평양 방어 사용중"

북한이 러시아에서 제공받은 방공 무기체계 '판치르 S-1'를 이미 평양 방어에 활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왔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1일(현지시간)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이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레이더 체계를 토대로 지대공 유도미사일, 대공포 등 무장을 갖춘 판치르는 러시아가 개발한 대표적인 방공무기다.

부다노우 국장은 "첫 번째 판치르는 이미 평양에 설치돼 수도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 인력들을 재교육하고 있고, 곧 북한이 이 기술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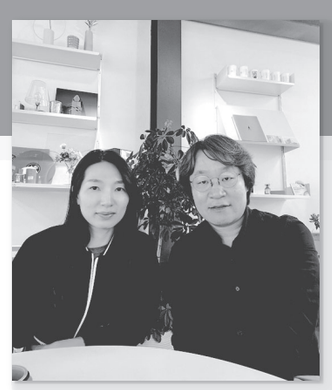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북한의 판치르 도입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 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여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